

보도시점 2026. 10. 29.(목) 15:30 배포 2026. 10. 29.(목) 13:00

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주체, 협동조합 역할 확대방안 논의

- 조용범 차관,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-

- 역대 최대규모 818억원 재정투자에 따른 철저한 사전 집행준비
-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의 노력 당부

기획예산처는 10월 29일(목) 오후 14시,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센터에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24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. 금일 회의에서 ①'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을 보고·논의하는 한편, 지난 4월 발표된 ②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현황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.

<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6.10.29(목), 14:00~15:30 /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
- 참석자 : (정부위원) 기획처 차관, 행안부·금융위·해수부 등 관계부처 담당 국장
(민간위원) 학계, 법률계, 현장, 금융계 등 민간위원 총 7명*
(유관기관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
* 조현경 위원(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), 김세운 위원(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), 정순문 위원(법무법인 더함), 이희숙 위원(재단법인 동천), 강민수 위원(한국사회연대경제) 김은선 위원(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), 조혜경 위원(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)

조용범 차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기본계획 발표('26.4) 후 반기가 지난 현재 위원님들과 그간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밝혔다. 조 차관은 양극화 심화,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 지역 경제사회 문제해결의 핵심주체로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,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·제도 개선 등 정책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하였다.

[① '27년 협동조합 재정지원방향]

금일 회의에서는 우선, 협동조합 성장 촉진을 위한 내년도 재정지원방향이 보고되었다. 정부는 '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1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,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X·DX 전환 및 금융지원, 선도대학을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,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 아울러, 현장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, 유관기관 등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중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회 통과 즉시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.

[②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추진현황 점검]

이어서, 정부는 지난 4월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('26~'28)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, 총 69건의 과제 전부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부문별로 ①법령정비가 필요한 과제 중 사회연대경제 전반의 추진체계 확립, 빈집정비 사업 허용 등은 관련 법령을 제·개정 완료하였으며, 협동조합 효율성 제고, 사회적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중이라 하였다. 또한, ②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신탁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을 활용한 금융지원 확대를 독려하고,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전용 융자트랙 등을 지속 지원하는 등 재정·금융지원 부문도 정상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. 한편, ③부처·관계기관·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경영공시 운영실태 점검 및 부실·지연공시 행정제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.

마지막으로 조 차관은 제5차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는 한편, 관련 법령개정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	책임자	과 장 이정운 (044-214-1750)
		담당자	사무관 배준혜 (jhbae10@korea.kr)
			사무관 류동재 (dongjae1635@korea.kr)